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 문재인 정권 실정 백서

2020. 3



---

발행인 : 성동규

지은이 : 김창배, 노명순, 장경수, 김신의

편 집 : 간행물편집위원회 (편집장 이윤식)

발행일 : 2020년 3월 16일

발행처 : (재)여의도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인 쇄 : 디엔시파크

---

## 발 간 사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은 낡은 운동권 이념과 포퓰리즘으로 오염된 정책들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예상대로 그 부작용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야심작인 소득주도성장은 ‘국가주도 빈곤’이라는 민낯으로 진작에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효율성 따위는 내팽개쳐 버린 ‘탈원전’ 정책은 수십 년 공들여 세운 글로벌 원전강국의 위업을 한순간에 탈탈 털어 먹었습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굴욕적으로 매달린 ‘북한 비핵화 쇼’로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게 조차 홀대받는 ‘삶은 소대가리’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나아가, 생산, 소비, 고용, 수출, 성장률, 소득분배 등 모든 통계지표가 추락하며 정책실패의 부작용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 정권에게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전 정부 탓, 대외여건 핑계, 통계조작, 희망고문, 정신승리 등 온갖 꼼수를 총동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을 탓하며 모든 실정을 전염병에 덮어씌우려 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옳았다”며 잘못된 정책들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아집을 부립니다. 부동산, 교육,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미래와 관련된 중요 정책마저 총선을 위한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 정권만 연장하면 된다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 정권의 폭주기관차를 멈추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회복불능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한 달이란 시간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거짓, 위선, 편가르기, 나라망신 등 지난 3년간 문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실정들을 선별해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파멸과 회생이나를 놓고 벌이는 건곤일척 승부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심판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제사회정책연구실의 김창배 실장, 노명순 연구위원, 장경수 선임연구원, 김신의 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여의도연구원장 성동규



# CONTENTS

작성: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연구실\*

- I. 文정권의 ‘국민기만’ / 1
- II. 文정권의 ‘내로남불’ / 15
- III. 文정권의 ‘편가르기’ / 27
- IV. 文정권의 ‘나라망신’ / 39

---

\* 김창배 연구위원, 노명순 연구위원, 장경수 선임연구원, 김신의 연구원





# I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1. 최저임금 인상은 90%의 긍정적 효과? / 3
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늘었으니 최저임금 잘못 없다? / 4
3. 2019년 성장률이 점차 개선된다고? / 5
4.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 6
5.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2위? / 7
6. 고용 'V자형' 반등? / 8
7. '소주성' 덕분에 저소득층(하위 20%)의 소득이 개선? / 10
8. 올해 수출이 회복 조짐? / 11
9. 수출주도 성장모델로 양극화 극심? / 12
10. 완전한 비핵화, 北 김정은과의 공동 목표? / 13



## 1. 최저임금 인상은 90%의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2018.5.30.)

- 자영업자, 실업자를 제외하고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꼼수
  - 폐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실직한 수십만 명은 국민이 아닌가?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건 너무도 당연
- 아서 래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그렇게 명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
  - ※ 아서 래퍼: 서울과 세수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래퍼곡선’을 제시
  -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 (2019.1.2.)

## 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늘었으니 최저임금 잘못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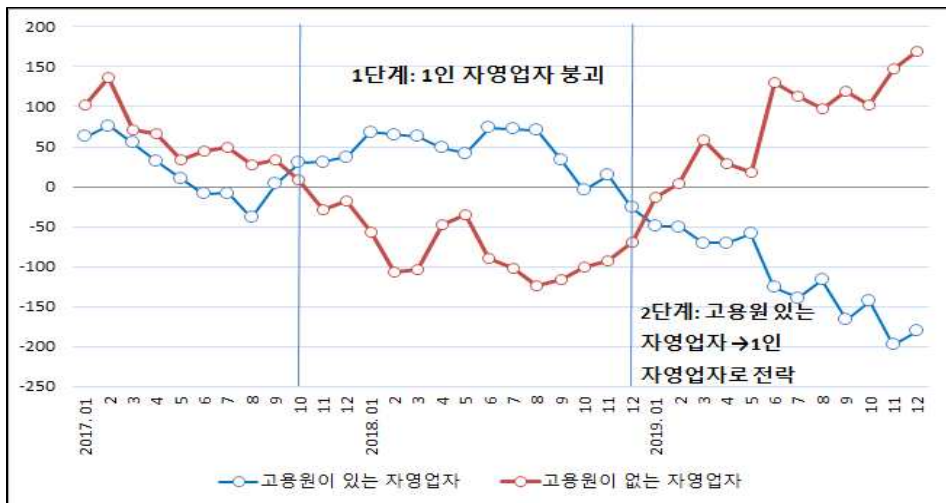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약화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018.8.22.)

-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취약한 계층마저 무너진다는 당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것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으나 불과 수개월 만에 들통
  - 2018년 12월부터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감소하기 시작
    - 1단계: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먼저 붕괴
    - 2단계: 고용원을 줄이며 그나마 버티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있음

[그림 1-1] 1인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順으로 붕괴

(단위: 천명)



### 3. 2019년 성장률이 점차 개선된다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2019.4.29.)

○ 회복될 것이라 장담했던 2019년 성장률은 2.0% 턱걸이

- 그나마도 민간 역동성 죽이고 세금으로 ‘분식(粉飾)성장’ 한 것
  - 2019년 성장률에서 정부부문의 기여도(1.5%p)는 민간(0.5%p)을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슈퍼예산(전년비 9.5% 증가)을 통해 민간의 성장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약속은 기만적 구호였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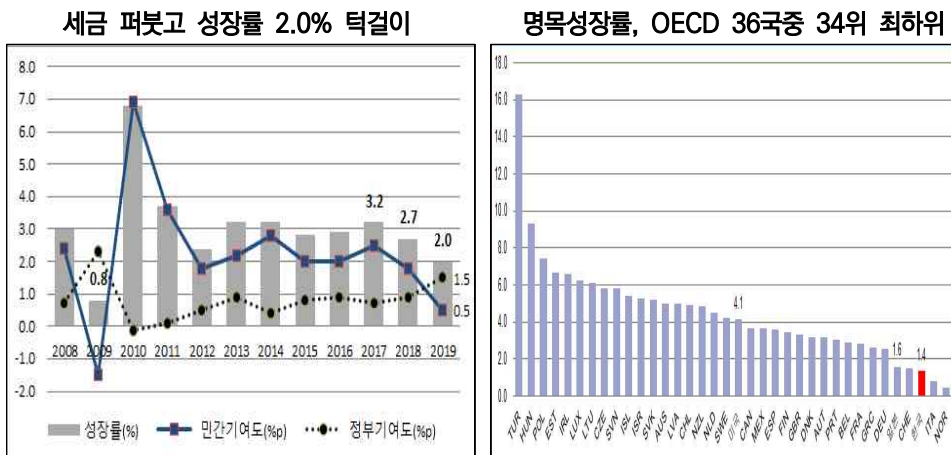
○ OECD는 2019년 한국 명목성장률이 1.4%로 낮아져 OECD 36국 중 34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16위였던 순위가 문 정부 들어 2년만에 18계단 추락

○ 극일, 반일 외치더니 성장률은 57년 만에 일본에도 추월당함

[그림 1-2] 2019년 성장률 2.0% 턱걸이, OECD 최하위 수준

(단위: %, %p)



## 4.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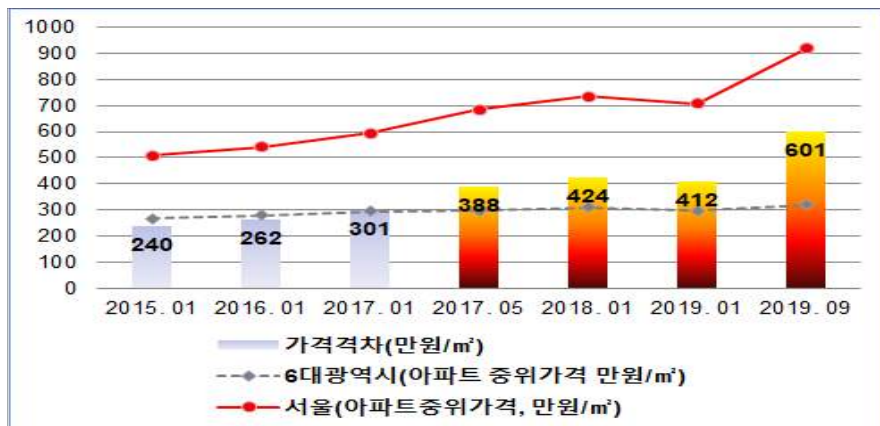
“현 정부 들어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문 대통령,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2019.11.19.)

- 18번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는 동안 주택시장에서는 ‘정부 대책 발표 → 집값 반짝 안정 → 재상승’의 흐름만 고착
  - 일례로 2018년 9·13 대책 영향으로 서울 집값은 2018년 11월 이후 하락하는 듯 했으나 2019년 초여름부터 다시 급등
- 문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55% 급등
  - 서울-6대광역시 간 아파트 중위가격의 편차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88만원/㎡에서 2019년 9월 601만원/㎡로 상승
  - ※ 아파트 중위가격: 전체 아파트를 매매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그림 1-3] 서울-6대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편차 확대

(단위: 만원/㎡)



## 5.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2위?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2위 실적, 5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FDI 동향’ 보도자료, 2020.1.6.)

### ○ 일상화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통계 해석의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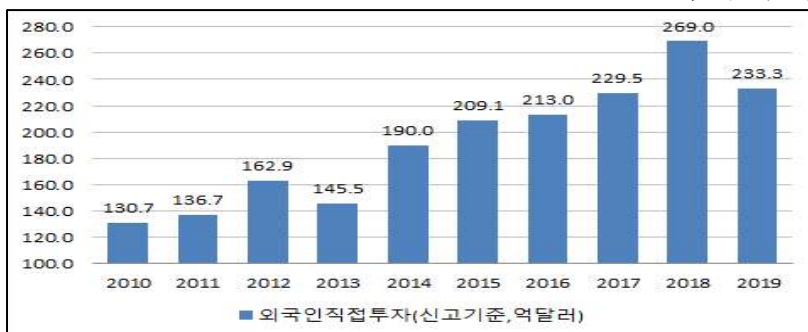
-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한 것이 팩트
  - 연간 233.3억달러(신고 기준)로 전년보다 13.3% 감소
- 하지만 문 정부는 ‘역대 2위’라고 말로 국민을 호도
  -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대폭 급감하지 않는다면 역대 2위가 당연
  - 고용률이 하락(2017년 60.8% → 2018년 60.7%)했을 때도 역대 2위라는 통계 분칠을 내놓은 전력

### ○ 더구나 ‘해외투자로 나간 돈’이 ‘국내투자로 들어온 돈’의 5.5배에 이르는 상황

- 이는 ‘떨정한 기업’ 등 떠밀고 ‘오려는 기업’ 되돌렸기 때문
  - 2019년 1~3분기 중 해외직접투자는 419억달러로 전년동기비 14.6% 증가한 반면, 동기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도착기준)는 76억달러로 전년동기비 35.8% 감소

[그림 1-4] 외국인 직접투자, 2019년 중 13.3% 감소

(단위: 억달러)



## 6. 고용 'V자형' 반등?

“작년 취업자,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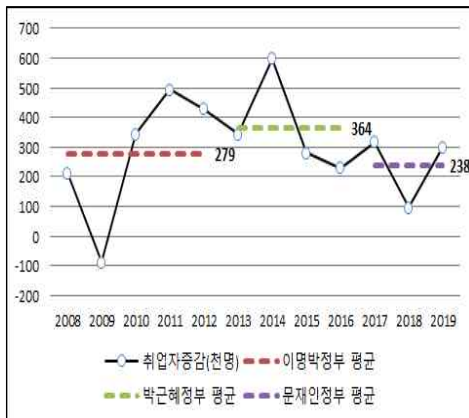
(홍남기 부총리,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 2020.1.15.)

### ○ 2018년 고용참사에 대한 기저효과에 불과, 증가 추세는 오히려 악화된 상황

- 취업자 수 증가 폭, 문 정부 이후 매년 약 13만명 감소
  - 36.4만(13~16년 평균) → 23.8만(17~19년 평균)
- 고용률(15~64세) 증가세도 문 정부 들어 반 토막
  - 증가폭: 0.4%p(12~16년 평균) → 0.2%p(17~19년 평균)

[그림 1-5] 취업자 증가 폭 둔화

(단위: 천명)



[그림 1-6] 고용률 증가 반토막

(단위: %, %p)



### ○ 그나마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단기 노인 '알바'형 일자리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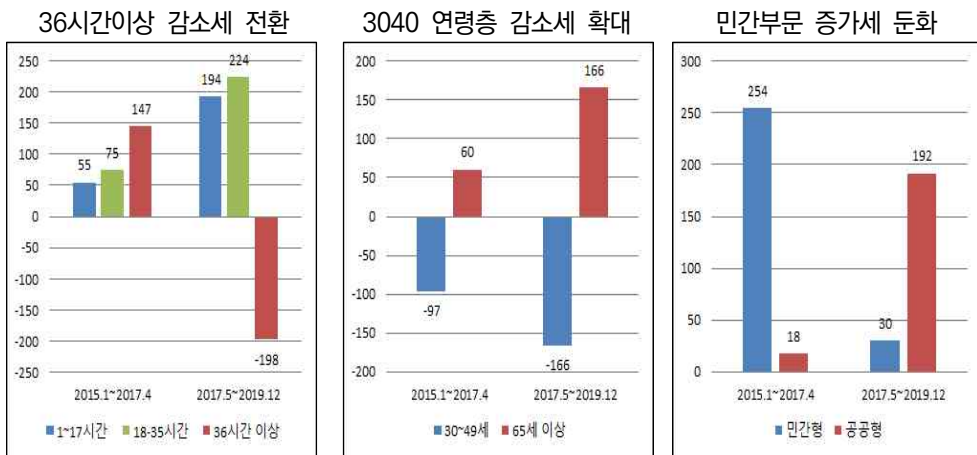
- 문 정부 집권 후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는 급증



-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경제의 허리 30~40대 연령층의 취업 감소는 확대,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급증
- 세금에 기여하는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금투입에 의존하는 공공형 일자리만 급증
  - ※ 공공형 일자리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농림어업 + 보건업·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

[그림 1-기] 세금으로 만든 단기 노인 '알바'형 일자리 위주로 증가

(단위: 천명)



## 7. '소주성' 덕분에 저소득층(하위 20%)의 소득이 개선?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2020.1.20.)

○ 문 정부 들어 기록 경신을 거듭하던 소득격차가 고점에서 소폭 반락한 것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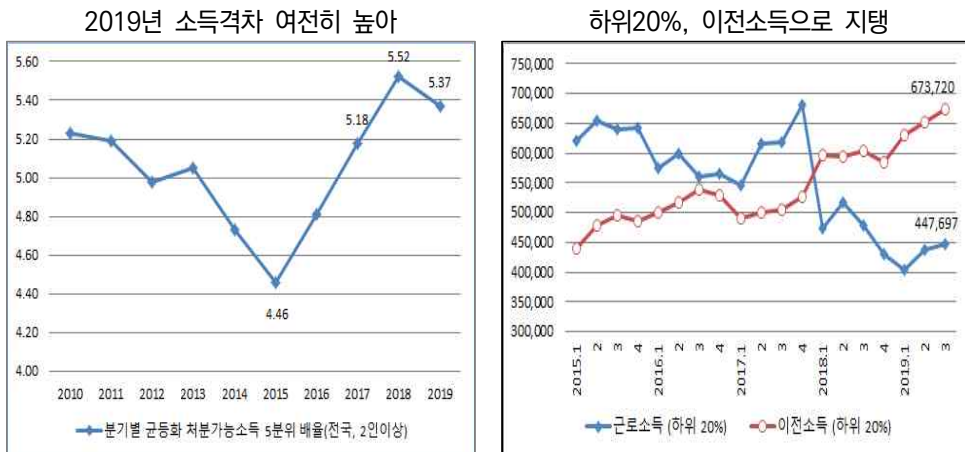
- 2019년 소득5분위배율은 5.37배로 2010년 이후 최고치인 2018년 (5.52배)보다 겨우 0.15배 포인트 하락한 것임
  - 이전 정부 기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 1분위 소득 증가? 실상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배급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

- 근로소득보다 정부가 지원한 이전소득이 큰 '배급경제'
  - 2019년 3분기의 경우,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약 44만8천원)보다 재정에 의존하는 이전소득(약 67만3천원)이 약 1.5배 많음

[그림 1-8] 여전히 큰 소득격차, 배급받는 처지로 전락한 저소득층

(단위: 배, 원)



## 8. 올해 수출이 회복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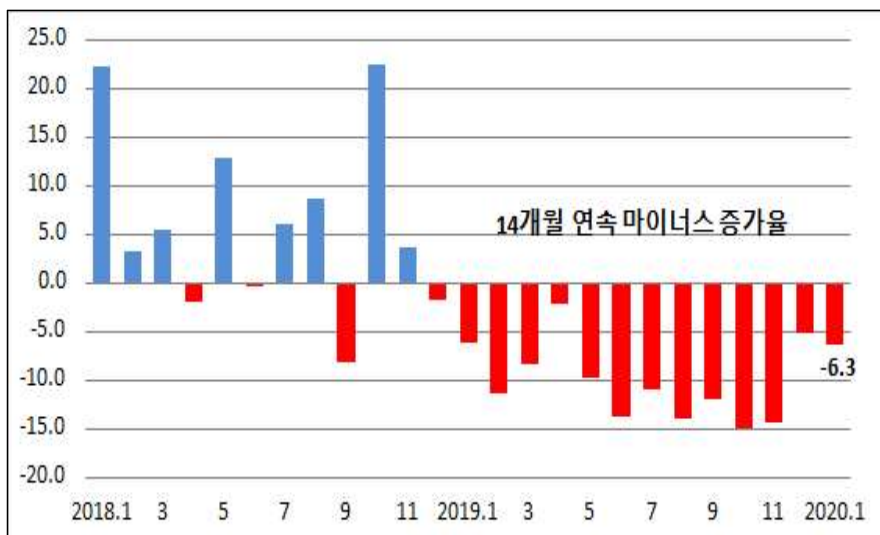
“새해 들어 경제 반등 징후… 연초부터 일평균 수출이 증가”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2020.1.20.)

-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하더니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
  - 수출이 1월 1~10일 중 5.3% 증가하자 반등의 징후라며 자랑
  - 하지만 수보회의 다음날인 21일 관세청은 1월 1~20일 중 수출이 0.2% 감소했다고 발표
    - 결국 1월 전체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장기 부진인데 겨우 10일간의 통계가 좋아졌다고 ‘호들갑’을 떠낸 셈

[그림 1-9] 수출증가율,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단위: 전년동월비 %)





## 10. 완전한 비핵화, 北 김정은과의 공동 목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2018.4.27.)

- 북한은 2019년 12월 31일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비핵화 약속을 사실상 파기
  - 김정은은 “미국이 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
- 이러한 결과를 예상 못했다면 무능의 극치이며 알고서도 굴욕적 구애와 퍼주기를 밀어붙였다면 대국민 사기 행위



## II.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1. 한·미 FTA / 17
2. 국가채무비율 / 17
3. 일자리 예산 54조원 / 19
4. 인사 5대 배제 원칙 / 20
5. 낙하산 인사 / 21
6. 내부 고발자 / 22
7. 특별감찰관제 / 23
8. 탈원전 정책 / 24
9. 검찰독립 / 25
10. 댓글조작 / 26





## 1. 한·미 FTA

*“서로 상호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거예요, 뭐 이런 조약이 다 있어?”*

(문재인 민주당 대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2011년)

- 문 대통령, 야당시절 한미FTA “결단코 반대한다”며 투쟁
  -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였으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음
- 집권하자 한미FTA 적극 옹호 (2017.6.28. 방미중 기자회견)
  - “양국간의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한·미FTA가 양국의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독소조항이라며 재협상해서 폐기한다”던 투자자·국가간소송(ISD)도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커녕 오히려 되치기 당함
  - 노무현 정부, 2007년 4월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발 자료를 통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 제도로 정착된 제도”라고 주장했었음

## 2. 국가채무비율

*“나라 빚은 아~몰랑,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되나?, 국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에게 국민의 빚은 남의 빚인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 Handbook’ 中, 2016년)

- 국가채무비율(2016년 36.0%)이 건전하게 유지·관리되는데도 비난
  - 그동안 국가채무비율은 IMF의 권고대로 선진국의 경우 60%, 신흥국의 경우 40%가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지켜져 왔음

○ 그러던 문 정부, 집권하자 마지노선 40%를 무너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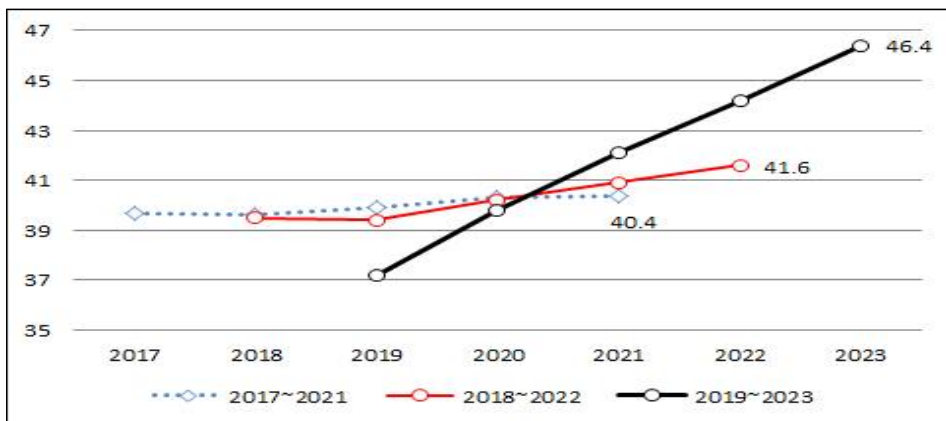
-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비율을 40%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40%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비판
-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홍 부총리의 말을 바꾸기 시작
  - “내년에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 (2019.5.23. ‘기자간담회’)
  - “40%대 중반은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2019.11.11. ‘기자간담회’)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3년 국가채무비율을 46.4%로 높여 놓음

- 이전연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유지하려던 노력은 폐기

[그림 II-1] 국가채무비율, 36%를 높다고 비판, 이젠 46%도 문제 없어?

단위: GDP대비 %



### 3. 일자리 예산 54조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듭니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2017.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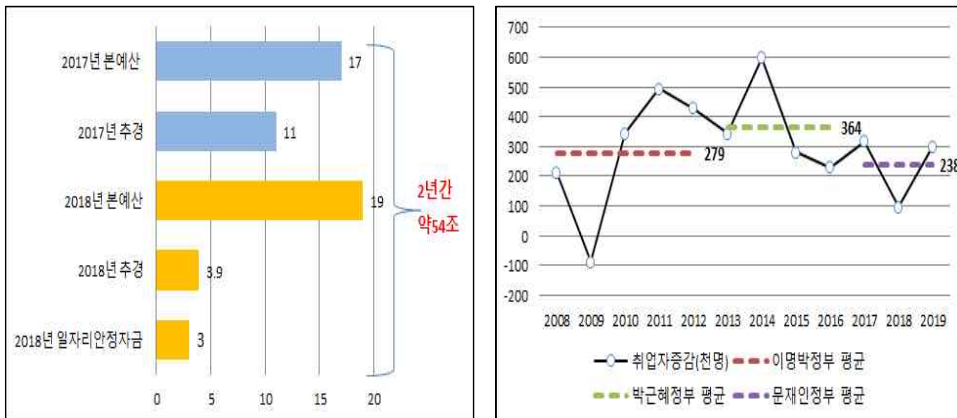
○ 그러던 문 정부는 2017~18년 중 일자리 예산으로만 54조원 투입

- 이는 4대강 사업의 약 2.5배에 이르는 금액
- 문 후보의 계산대로 하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약 245만개 만들 수 있는 금액

○ 하지만 취업자 100만명은 고사하고 문 정부가 만들어낸 취업자 증가폭은 오히려 축소

- 문 대통령 취임 이전 4년간(2013~16년) 취업자는 연평균 36.4만명 증가했으나 취임 이후 3년간(2017~19년)은 연평균 23.8만명으로 약 13만명 축소

[그림 II-2] 문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 투입에도 일자리 오히려 줄어



## 4. 인사 5대 배제 원칙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12.13.)

### ○ 소위 ‘인사 5대 배제 원칙’ 약속하더니 정권 잡자 내놓고 무시

-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장 전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탈세(쪼개기 증여), 김상곤 부총리는 논문표절(연구 부적절 행위)로 논란이 되었으나 임명 강행

### ○ 5대 원칙을 7대로 확대했으나 이는 기준 하향을 위한 꼼수

- 성범죄, 음주운전 등 두 기준을 더 추가(2017.11)했으나 기존 검증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존 위반자들에게 면죄부 부여
  -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의 경우만 대상으로 한정
  - 논문표절도 2007년 2월 이후 부정행위 등으로 배제 원칙 완화

### ○ 이제는 7대 원칙마저도 유명무실화

- 음주운전 경력 조대엽 교수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차관급)으로 임명
  - 조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음주운전 전력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으로 낙마한 인물
  - 이 때문에 음주운전 항목이 인사배제원칙의 새로운 기준에 추가된 것임에도 이를 무력화시킴

## 5. 낙하산 인사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문 대통령, 취임사, 2017.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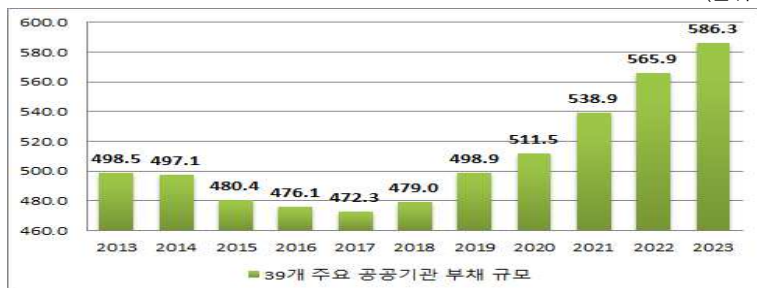
### ○ 그런데 소위 ‘낙하산 인사’가 현 정부에서 오히려 더 증가

- ※ 낙하산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 여권과 관계된 인사 중 전문성과 관련성이 낮은데도 임명된 경우
-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347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로 드러남
- ※ 바른미래당 발표 자료: 총 3,368명(2019.8말 기준) 중 515명(전체의 18.7%)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9월 19일 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 ※ 추경호 의원실 자료

### ○ 낙하산 인사와 무관치 않은 공공기관 부채 급증

- 전문성, 책임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이 ‘문케어’, ‘탈원전’ 등 정치 우선 정책에 따른 경영실적 부실화를 제어하기는 역부족
- 실제로 박근혜정부 기간 중 감소세를 지속하던 3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역주행하며 급증

[그림 11-3] 박근혜 정부에서 줄던 공공기관 부채,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  
(단위: 조원)



## 6. 내부 고발자

“내부고발자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민주당 대선 공약집 18쪽, 2017.4.28.)

- 고영태는 의인이라 칭하고 이전 정부에서의 ‘내부고발자’들은 중용
  -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최순실 스캔들 공범인 고영태를 의인으로 추켜세움
  - 박근혜 정부에서 조직 내부의 문제를 고발했던 윤석열 검사와 김형연 판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
- 현 정부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김태우, 신재민에게는 고발 압박에 인신공격까지 자행
  - 기획재정부는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 의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큰 돈 벌기 위해 폭로에 나선 사기꾼”에 비유하며 인신공격까지 자행
  - 특감반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도 기소
    -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윗선 인물을 소환 조사하지도 못한 채 공익신고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

## 7. 특별감찰관제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명분으로 친문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제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3년 4월)

- 40개월 이상 공석, 문 정권은 ‘공수처 만들면 다 해결된다’ 핑계
  -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2016년 9월 물러나면서 40개월 이상 대통령 측근 감시가 실종된 상태
- 청와대가 만들고자 하는 공수처도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들은 감시 대상에서 빠지는 등 한계
  - 특별감찰관은 사전 검찰로 비위 행위를 적발할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반면,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만 수사에 나설 수 있어 검찰의 한계가 있음
  - 장영수 교수(고대 법전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는 청와대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
- 문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의심
  - 대통령 측근 비리 감찰을 맡은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비리의 축소·은폐 중심이었음이 드러난 데서 왜 특별감찰관 지명을 차일피일 미루었는지의 추론이 가능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 사찰 의혹, 조국 前 민정수석 사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前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은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사전에 감지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

## 8. 탈원전 정책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 2017.6.19.)

### ○ 국내에는 안전을 이유로 자해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4)에서도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원전 건설도 중단하는 등 원전 축소기조 유지

### ○ 해외엔 ‘원전 세일즈’

- 문 대통령 “한국 원전 경쟁력은 최고라고 인정해 줄 정도” (UAE 원전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 2018.3.26.)
-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 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코 총리와의 회담, 2018.11.29.)
-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 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면담, 2019.4.22.)

### ○ 이는 ‘내가 못 먹는 음식’을 파는 파렴치 행보



## 9. 검찰독립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중략)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2019.7.25.)

### ○ 이전 정권에 칼을 휘두르는 검찰을 정의의 사도로 치켜세움

-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즉각 우병우 前 수석을 조사해야 하고 청와대도 제대로 압수수색 돼야” (2016.10.31.)
- 이인영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2019.6.19.)

### ○ 하지만 자신들의 ‘살아있는 권력’에 칼 댔더니 수사방해하고, 검찰학살

- 추미애 장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빙자해 검찰 학살 인사 강행
  -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 선거개입, 조국 일가 비리 등 문 정권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총장의 대검 참모진 등을 대거 좌천시킴

### ○ 문 대통령, “검찰 성찰해야”라고 경고하며 말 바꾸기

- 국민에게 있다던 검찰인사권이 이제는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

## 10. 댓글조작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략)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중략)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것”

(문 대통령, 블로그 글, 2013.6.4.)

### ○ 댓글도 내로남불

- 국정원 댓글은 국기문란이라더니 드루킹 댓글은 개인일탈로 치부
- 하지만 드루킹은 국정원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댓글을 대량 조작한 초특급 대형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사건임이 드러남
  - 드루킹 : 댓글 118만8,866건에 공감·비공감 8840만1,214회 조작
  - 국정원 : 댓글 28만8,926건, 공감·비공감 1,200회 조작

### ○ 문 대통령, ‘드루킹’ 관련 다음 의혹들에 자유로워야 ‘로맨스’

- 첫째, 2017년 대선 기간 드루킹이 운영하던 단톡방 문자메시지에서 나온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
- 둘째, 드루킹이 당시 문재인을 지지하는 선플운동 조직인 ‘경인선(經人先,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만든 배경에 문재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밝힌 내용
- 셋째, 2017년 4월 민주당 경선에서 김정숙이 지지단체를 찾아다니며 인사하던 중, “경인선!” 함성 들리자 그쪽으로 향하며 경인선에도 가야 한다고 말한 사실

### Ⅲ. 문재인 정권의 '편가르기'

1. 부동산의 정치화 / 29
2. 차별적 법치주의 / 30
3. 노조존중 정책 / 30
4. 편가르기 인프라 구축 '방송·언론 장악' / 32
5. 외교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 33
6. 정년 연장 재점화 / 34
7. 건국절 논란 / 35
8.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 36
9. 친중·반미 노선 / 37
10. 편가르기 증세 / 38



## 1. 부동산의 정치화

“일부 지역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0.1.14.)

- 문 대통령, 2018년, 2019년 신년사에서 연급조차 않더니 2020년에는 살기등등하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
  - 좌파정권은 부동산을 경제가 아닌 정치로 인식하는 경향
    - “다른 경제정책이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핑” (장하성 前 대통령정책실장)
- ‘편가르기’ 부동산 정책을 총선 승부 전략으로 내세운 것
  - 강남 부동산과의 전쟁은 ‘1% 우파 표를 잃고, 99% 좌파 표를 얻는’ 유리한 선거 전략이라는 계산
    - “이번 총선에서 해당 정책 방향, 법안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서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1.21.)
  - 국가경제와 미래에 몰고 올 파장은 안중에도 없는 듯
    - 시장을 이기겠다는 억지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초래해 우리 경제를 회복 불가능상태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음
- ‘복핵쇼’, ‘반일쇼’ 약발 떨어지니 이제 ‘부동산쇼’인가

## 2. 차별적 법치주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조국 고초에 마음의 빔을 졌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문 대통령, 2020년 신년 기자회견, 2020.1.14.)

- 친구는 죄를 지어도 무사통과, 적은 없는 죄도 만들어 엄벌
  -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조국은 감싸야 할 ‘친구’, 조국 수사의 칼을 댄 검찰을 향해서는 초법적이라며 ‘개혁대상’으로 몰아
-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좌파 진영의 보스’임을 만천하에 고백
  - 서초동 조국 지지 집회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지만 훨씬 큰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는 외면
- 분열된 국론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의 참담함, 책임감은 없는 듯
  - “국론분열로 보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은 ‘대수롭지 않다’는 식
  - 후보시절 ‘국민이 모여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끝장 토론이라도 하며 설득하겠다”던 말은 식언이었다

## 3. 노조존중 정책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면에서 노동 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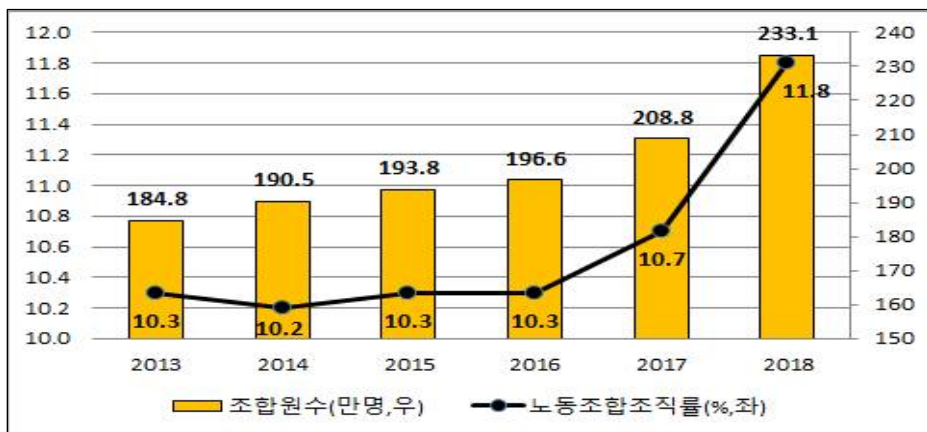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7.8.17.)

- 문 정권의 노조편향 정책으로 민노총은 사상 최대 ‘호황’ 구가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민노총 요구는 그대로 정책화
    -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개정도 밀어붙임

- 노조 출신들은 공공기관 이사장, 위원회 위원 등 정책의사결정의 상층부에 대거 진출
- 노조 조직률이 급등하는 등 노조 '중흥기' 맞음
  - 2018년 노조 조합원 수가 사상 최대인 233.1만 명 기록(10.4% 증가)
  - 노조 조직률은 11.8%로 전년보다 1.1%포인트나 급등

[그림 Ⅲ-1] 문 정권 들어 중흥기 구가하는 노동조합

(단위: %, 만명)



○ 반면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적폐세력'으로 몰아 겁박

- 글로벌 인하추세와 정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 25%로 인상
- 기업 손발을 묶는 반(反)기업적 상법 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강행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동원해 기업경영 간섭 강화
  - ※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국민연금은 2018년에 도입

## 4. 평가르기 인프라 구축 '방송·언론 장악'

“총선의 성격에 대해 정부의 실정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KBS 뉴스9, 2019.12.27.)

### ○ 친여 인사 위주의 경영진 대거 선임

- 방통위원위원장을 비롯, KBS·MBC·TBS·EBS 등 공영방송 사장이 친여 낙하산 인사로 선임되면서 방송의 공영성·공정성 훼손
  - MBC 최승호 사장 취임 후 파업불참자 업무 배제 (중앙일보 2019.10.15.)
- 방송사 '시청자 위원회'도 친정부·운동권 중심으로 구성(조선일보, 2019.10.24.), 자정노력 외면

### ○ 이들은 편파방송을 일삼는 어용 방송으로 화답

- “다가올 총선의 성격에 대해 정부의 실정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KBS 뉴스9, 2019.12.27.)
  - 애초부터 한국당에 불리하도록 설계된 설문지로 드러남
-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당의 정체는?” (MBC 뉴스데스크, 2019.1.9.)
  - 하지만 당시 기자가 전화한 번호가 비례자유한국당(現 미래한국당) 번호가 아닌 한국당의 대표번호였던 것으로 확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향적인 여론조사”라며 KBS에 시정명령

- MBC는 사과 방송 내보냄



## 5. 외교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자사고, 외교,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공정성에 대한 불신 등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 반드시 해결”

(문 대통령,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 2019.10.25.)

### ○ ‘백년대계’ 교육정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덜컥 번복

- 교육부는 5년 단위의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 추진 중이었음
- 대통령, “고교 서열화가 기회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발언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 직후, 2019.9.10.)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외교, 자사고 등 일괄 폐지 발표 (2019.11.7.)

### ○ 하지만 ‘일괄폐지’에 따른 부작용,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의 진정성에는 의구심

- 수월성 교육의 수요와 설립 취지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획일적 평등교육의 추진은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과 불안감을 증폭
- 가중된 교육혼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교육부와 정부에 집중되면 일괄 폐지 정책의 명분도 동력도 모두 약화될 게 자명

### ○ 조국 사태 후 여론 무마 및 시선회피용으로 ‘일괄 폐지’로 노선 변경한 것

- 교육의 수월성, 다양성을 버리고 시대착오적 평등지상주의로 퇴행
- 교육적 목적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우선
  - 총선을 앞두고 절대 다수인 일반고 학부모의 표심 유혹에만 골몰

## 6. 정년 연장 재점화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

(문 대통령,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20.2.11.)

### ○ 시기는 물론 내용 모두 부적절한 대통령의 ‘정년연장’ 주문

- ‘계속고용제’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고용 연장’은 사실상 ‘정년 연장’
  - ※ 계속고용제도: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연장을 선택하는 제도
- 정년이 60세로 크게 늘어난 게 불과 서너 해인데다 지금은 청·장년층의 실업이 엄중한 시기
- 산업현장에서는 임금피크 등 ‘60세 정년’과 관련한 갈등이 여전

### ○ 몇 개월 전 ‘논의 보류’ 결정을 갑자기 뒤엎은 배경에 의구심

- 지난해 9월, 1기 인구정책TF는 계속고용제의 도입 여부를 2022년부터 검토하기로 결론내린 바 있음
- 청년실업 해소,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선 등 정년연장의 선행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이 미래 국가경제시스템을 좌우할 수 있는 ‘정년 연장’ 이슈를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불쑥 던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

### ○ 특정 세대의 표심을 노린 ‘총선용 발언’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려움

## 7. 건국절 논란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변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문 대통령, 제99주년 3.1절 기념사, 2018.3.1.)

### ○ 역사 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문 대통령

- 기본적으로 역사, 특히 근현대사는 특정 정권에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
  - 건국시점은 친일반일,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의 수립을 독립국가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건국으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

〈표 Ⅲ-1〉 건국 100주년 논란, 좌우 평가르기 시도

	우파 진영	좌파 진영
건국 시점	1948년 8월 15일 제헌국회 수립일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주요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정부수립 의의 평가</li> <li>✓ 남한 정부의 정통성 확립</li> <li>✓ 단독 정부수립 폄하 의도 차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운동, 친일행위 재평가</li> <li>✓ 상해 임시정부 계승은 헌법정신</li> <li>✓ 북한을 대한민국 역사에 포함</li> </ul>

### ○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우파 진영을 친일·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려는 일종의 ‘역사공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독립운동 및 친일행위에 대한 재평가 광풍 → 좌우간 대립 격화 → 친일 對 반일이라는 이념적 평가르기로 귀착될 가능성

### ○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와 국력 낭비만 초래

## 8.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는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하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8.9.5.)

- 이후 민주당은 ‘2차 이전’을 21대 총선에 공약으로 내놓기로 방침
  - 국토부는 2019년 3월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 ‘무리수’,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총선 전 공약 발표 차질
  - 총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에 대한 평가도 소홀히 한 채 추가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며 국토연구원이 반발
    - 과거 지방 이전으로 인해 지역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직원 이탈과 업무 효율 하락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
- 그러자 민주당은 이전 도시를 정하지 못하면, 이전 가능한 기관목록이라도 만들라고 연구원을 압박
- 효율성은 제쳐놓고 공공기관 ‘나눠주기’ 식의 관건선거를 하겠다는 것
  - 실제로 지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환영하지만 공공기관 본사가 위치에 있는 수도권은 당혹해하는 분위기
  - ‘대표(買票) 정치’의 향수인가
    - “신행정수도 건설로 대선 때 좀 재미를 봤다.” (노무현 前 대통령, 신행정수도 건설 국정과제회의, 2003년 11월)
-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대 정책마저 총선 도구로 생각하는 저급한 행태

## 9. 친중·반미 노선

“법과 덕을 앞세우고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중국몽)에 함께 할 것”

(문 대통령, 베이징대 연설, 2017.12)

### ○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친중 선언에 줄줄이 ‘중국 눈치 보기’

- 문 대통령, 중국에 주권을 양도한 것과 다름없는 3불정책 약속
- 노영민 비서실장은 주중대사 시절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기록을 남김
  - 만절필동은 모든 것은 동으로 간다는 뜻이지만 중화사상이 배어있는 글
- 그런데도 시진핑의 과도한 사드 보복, 문 대통령에 대한 고의적인 홀대, 신임 중국 대사의 코로나 관련 내정간섭 발언에도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

### ○ 반면 오랜 동맹 미국에 대해선 거친 반감 집단 표출

-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관련해 “제재 촉발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발언 (2020.1.16.)
-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즉각 반발했으며, 여당 의원들도 “대사가 총독이나”며 인신공격성 비난 공세

### ○ 독립문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 세운 것임을 되새길 필요

-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시진핑의 중국몽에 동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 10. 편가르기 증세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2017.7.21.)

### ○ 문 정권의 ‘가진 자에겐 더 걷어도 된다’는 인식을 드러냄

-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식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
- 하지만 이미 고소득층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 비중도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자증세는 포퓰리즘
  -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상위 10퍼센트의 비중은 71.8%이고 소득세 면제자 비중은 38.9%
  - ※ 주요국 근로소득 면제자 비중: 미국(32.5%, 2014), 캐나다(17.8%, 2015), 일본(15.5%, 2015), 영국(2.3%, 2015) (자료: 한국경제신문, 2017.8.8.)
- 문 정권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 → 25%)도 기업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벌 감세추세와는 완전 역주행한 것

### ○ 부자증세의 ‘노림수’는 국민 편 가르기

- 여차피 좌파정부를 지지하지도 않고 선거에서도 표를 주지도 않을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조세저항’에 부딪힐 염려도 낮음
- 더구나 가진 자의 것을 증세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선심성 퍼주기라면 나머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계산

### ○ ‘세원확대’와 ‘보편과세’를 전제하지 않은 증세는 분열 책동

## IV. 문재인 정권의 '나라망신'

1. 미군 철수 時 中이 韓에 '핵우산' 제공 / 41
2.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 소동 / 42
3. 韓, “지소미아 종료 결정 미국 측 이해” / 43
4. 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구걸 / 44
5. 중국 눈치보다가 ‘中 입국제한’ 골든타임 놓친 한국 / 45
6. 대통령 부재중인 체코 방문 / 46
7. 캄보디아에 연속 외교결례 / 47
8.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외교 의전 실수 / 48
9. 靑, 일본 원전사망 통계 잘못 인용 / 48





## 1. 미군 철수時 中이 韓에 '핵우산' 제공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회의, 2019.12.4.)

- 한국의 안보특보가 국제회의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하면서 중국에 우리 안보를 맡기면 어떻겠느냐는 어이없는 질문
  - 미국 측인 찰스 쿵찬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반도에 전쟁이 100% 없을 거라고 너무 확신하지 말라(don't be so sure)”며 일축
- 이후 미국은 문정인 특보의 주장에 ‘웃기는 소리’라는 반응
  - “홍콩이 좋은 예”라며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공산국가 중국이 방어해 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릭 스콧 미국 상원의원, 공화당)
  -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민주당)

## 2.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 소동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덕담을 전달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0.1.10.)

### ○ 북한이 비난 담화(2020.1.11)를 발표하면서 망신스러운 결말

-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 조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 “남조선 당국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 “증빨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

### ○ 적절한 사후 조치마저 외면한 문 정부, 최소한의 국가 위신과 품격마저 손상

- 북의 주장이 과장된 것인지,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대북 관계 개선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뭉개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

### 3. 韓, “지소미아 종료 결정 미국 측 이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청와대, 2019.8.22.)

#### ○ 미 정부, “사실이 아니다” 공개 반박

- 한미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
- 그동안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며 종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던 상황

#### ○ 미 정부, 한국 정부에 항의

- 美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도 표했다”고 밝힘
- 美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논평

## 4. 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구걸

“여태껏 없었던 최고의 환대를 받았다”

(프랑스 방문한 문 대통령 위한 국민 만찬 이후, 2018.10.15.)

### ○ 마크롱 대통령의 분명한 거절의사를 ‘최고의 환대’로 포장

-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구체적 공약을 이행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고, 만찬사에서는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하는 기저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언급
- 프랑스의 언론도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도박’으로 평가할 정도
  - “미국을 상대로 기존의 불안정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종전 선언을 통해 모든 상징적 적대 관계를 종결할 것을 요청하는 시도는 도박과도 같다” (르피가로’ 특집기사)

### ○ ASEM 정상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요청은 싸늘한 냉대를 받음

- 제12차 ASEM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 유럽 주요 국가들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고수

### ○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전혀 설득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는 인상만 심어준 꼴

## 5. 중국 눈치보다가 ‘中 입국제한’ 골든타임 놓친 한국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2020.2.3.)

### ○ 이미 미국 등 60여 개국은 중국인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 시행

- 미국은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해 미국 입국을 불허했고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도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 중국의 맹방이라는 북한은 중국인 전체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러시아도 중국과 접한 일부 국경을 폐쇄조치
- 홍콩도 8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중국인 외국인 포함)은 14일간 격리조치한다”고 발표

### ○ 우리는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中 입국제한’ 아직도 검토 중

- 초기방역은 허술히 한 채 뜬금없이 “우한 폐렴”이 아닌 “신종 코로나”로 불러 달라는 대국민 홍보, ‘도대체 뭐가 중한디?’
-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는 등 중국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보여주기식 뒷북 조치’만 시행
- 박원순 시장은 “이럴 때 우정을 확실히 만들어놔야 국가 이익에 부합” 한 다며 ‘준전시상황’으로 선동했던 메르스 때와는 다른 행보
-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입국금지 조치,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해야”라며 사실상 내정간섭의 발언을 해도 일언반구 못하는 정부

### ○ 결국 뒤통수 맞은 대한민국

- 중국으로 오는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에 대해 “과도하다”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항의에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건 방역”이라고 일축

## 6. 대통령 부재중인 체코 방문

‘체코(Czech)’를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로 오기

(외교부 공식 영문 트위터 계정, 2018.11.27.)

### ○ 외국을 방문중인 체코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와 회담을 갖는 비정상적인 외교

- 체코의 제1대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민방문 중으로 문 대통령은 ‘주인없는 집’을 방문한 무례를 저지른 셈
- 체코의 바비시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이 아닌 비공식 회담 진행

### ○ 더구나 외교부는 상대국가명을 오기하는 어이없는 행태로 망신

- 외교부가 공식 영문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체코 순방 소식을 알리며, 체코 대신 체코슬로바키아로 표기
- 옛 명칭인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로 잘못 표기한 것은 외교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치명적 실수

[그림 IV-1] 외교부,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오기(誤記)



## 7. 캄보디아에 연속 외교결례

‘대만’ 사진 올려놓고 ‘캄보디아’ 소개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2019.3.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영터리 캄보디아 국기 게양

(부산 아세안로 제막식, 2019.11.11.)

### ○ 대만을 캄보디아 소개… 청와대, 몇 시간 후 사과문 게재

- 문재인 대통령 캄보디아 국빈방문 중 청와대는 SNS 실수
  - ‘친절한 청와대’라는 게시물에 올린 사진은 캄보디아가 아닌 대만의 국가양청원(國家兩廳院) 사진이었음

### ○ 8개월 후 또다시 캄보디아 국기를 잘못 게양하는 결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11.25.)를 기념하기 위한 부산 아세안로(路) 제막식(11월 11일)에 영터리 캄보디아 국기 게양
- 게다가 “잘못 그려진 국기가 걸렸다”며 항의를 받았는데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 [그림 N-2] 캄보디아에 잇따른 외교 결례

대만의 국가양청원이 캄보디아에?

캄보디아 국기(위), 잘못된 국기(아래)



## 8. 말레이시아 국민방문 외교 의전 실수

*말레이시아어 인사말 4번 실수, 낮에 저녁인사 밤에 오후인사*

(문 대통령, 말레이시아 국민방문 중, 2019.3.13.)

### ○ 말레이시아 ‘현지어 인사’를 하려다 인도네시아어와 혼동하는 실수

- 마하티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슬라맛 소르 (Selamat sore)’라고 인사
  -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어 ‘슬라맛 소레’의 영어식 발음으로 말레이시아어로는 ‘슬라맛 썬팡(Selamat petang)’이라 해야 함
- 오후에 있던 할랄 전시회장에서는 오후 인사말인 ‘슬라맛 썬팡’이 아닌 ‘슬라맛 말람’이라는 저녁 인사를 함
- 저녁에 이어진 동포간담회와 국민 만찬에서 저녁인사 ‘슬라맛 말람’ 대신에 ‘슬라맛 썬팡’이라는 오후 인사를 하는 실수

## 9. 靑, 일본 원전사망 통계 잘못 인용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

(문 대통령,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2017.6.19.)

### ○ 문 대통령, 일본 신문 잘못 인용, 피폭 사망자 한 명도 없어

- 원전사고 이후 피난 중 건강이나 질병 악화로 죽은 사람이 1,368명이라고 보도한 도쿄(東京)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
  - 하지만 방사능 과다 피폭이 사인(死因)인 경우는 없었음

### ○ 日 외무성이 유감 표명하자 청와대는 착오였다고 해명

- “후쿠시마 원전 관련 사망자라고 했어야 하는데 ‘관련’이란 글자가 빠지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다”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

여의도연구원은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여연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미래통합당과 여의도연구원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